



## "국민의 눈과 귀 흐리려 말라"...분노의 결집 시작됐다

연합뉴스 구성원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정부의 무책임과 야당의 몽니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연합뉴스 새 사장을 뽑을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이 무한정 지연되는 현 사태를 두고볼 수 없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박성민 위원장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조합 전임자와 부위원장, 집행부장, 전직 전임자(조합 운영위원)들이 나서서 시위를 이어갔다.

집행부는 5월 17일부터는 1인 시위를 일반 조합원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하면서 10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12일까지 사흘간 조합 집행부에 1인 시위 참여 신청이 쇄도했다.

특히 고참 조합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12년 공정보도 쟁취 총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위원장, 최근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대표한 오정훈 전 위원장, 이주영·옥철 전 위원장, 파업 비대위에 참여한 권혁창, 고형규 조합원, 이정진 전 사무국장, 이세영 전 부위원장 등이 먼저 나서겠다고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대전·충남취재본부장인 정찬욱 조합원, 정보사업부의 김도형·최영찬 조합원도 1인 시위 대오에 함께 서겠다는 뜻을 조합에 전했다.

비조합원 중에서도 이강원 마케팅본부 부본부장과 최춘환 북한뉴스편집팀장이 후배들의 투쟁에 힘



을 보태겠다고 1인 시위를 신청했다.

이미 보직부장을 마쳤거나 현재 보직부장을 맡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거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합뉴스 구성원 전반이 정치권의 만행에 분노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합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뜻이 모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 경영진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전 조정부 사장에게 '사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형식으로도 입장문을 내어 정치권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현 사태 해결을 촉구해달라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경영진은 지역 조합원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올 경우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조합 활동'으로 보장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마저 거부했다.

지난 3월 말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새 경영진 선

임 지연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해 회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는 조 사장이 회사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연합뉴스의 대선배로서, 전직 기자회견장으로서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이 진흥회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질질 끄는 답답한 상황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는 준비를 다 마쳤으나,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 진흥회

를 출범시키지 못한다"고 둘러댄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인 우리로서는 청와대가 누구를 추천하는지를 보고서 1주일 안에 추천할 수 있다"고 버틴다.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점점 찾지 못하면서 진흥회 새 이사진 출범과 연합뉴스 새 경영진 선임은 기약없이 늦어지고, 이는 연합뉴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언론계 전반적인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상황에 대처할 조직개편과 신규사업 추진은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다. 새 편집총국장 내정부 터 시작돼야 하는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구성원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편집총국장 제도는 공정보도 쟁취 총파업의 결과물로서, 편집과 경영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균형잡힌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곧 편집총국장 인사 지연을 포함한 이번 사태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최종 뉴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명확하다.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은 연합뉴스 리더십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조합 집행부와 30대 집행부 전임자가 5월 14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17일부터는 시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의원과 사내포털을 통해서 알게 된 연합 구성원들의 1인 시위 참가 신청으로 5월 31일까지 일정이 예정되었으며 6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만간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이사 후보 추천이 마무리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은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합뉴스 구성원 전반이 정치권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1인 시위 참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 시위 참여를 근무 중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1인 시위 참여 안내 -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광장 (국민의 힘에서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할 경우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도 진행)
- 참여대상 : 연합뉴스 구성원 누구나 가능(지역 취재본부에서 오시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참가신청 : 노조사무실(내선번호 : 3620)이나 상근자 개인에게 카톡·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일정을 바로 조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진행 방법 :
  - 1) 조합에서 피켓 및 시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준비하였으며 예정된 시위장소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시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합 상근자가 주변에 머물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치적 중립 위해선 뉴스통신법 개정 불가피"...전 조합원 설문조사 18일까지 진행...언론노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연합도 동참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연합뉴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민'이란 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공영언론사들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취급됐다.

당장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연합뉴스 사장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정한다"고 자조해 왔다. 정부와 야당이 국민의 눈과 귀인 공영언론의 정상적인 운영을 나몰라라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다 연합뉴스를 사실상의 경영 공백 사태로 몰아넣은 작금의 상황도 공영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수준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의 근원에는 왜곡된 지배구조가 있다. 현행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이사 7명 중 5~6명을 여권이 독식하도록 설계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뽑힌 이사들에게 연합뉴스 구성원과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기 사장을 뽑을 권한마저 부여했다.

이런 사정은 여타 공영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 ◇ 언론노조, KBS·MBC·EBS·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투쟁 개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올해 초부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4개사다.

당초 언론노조의 투쟁 초점은 '공영방송'에 맞춰져 있었으나, 연합뉴스지부(이하 조합)의 요청으로 연합뉴스까지 포함한 '공영언론'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에 맞게 공영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언론노조는 시국선언과 대국민 여론조사, 기자회견은 물론 라디오 광고까지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여 6월 임시국회에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고, 불발될 경우 쟁의권을 발동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언론노조와 발맞춰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세를 고려할 때 어쩌면 이번이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KBS·MBC·EBS는 법개정 박차...연합은 입법안조차 없어

KBS, MBC, EBS는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의 개정안을 패키지로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공영언론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

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와 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도 앞다퉀 공영언론 3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면 소관 상임위의 병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입법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연합뉴스와 관련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 없다.

연합뉴스 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이유이겠으나, 연합뉴스 내부의 관심도 한참 떨어져 있었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돌이켜보면 배재정 청와대 정부비서관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4년 진흥회 이사를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여야가 6명씩 동수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통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최근이었다.

### ◇ "정치인 아닌 국민이 이사·사장 추천"...뉴스통신법 개정 추진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대통령이 진흥회 이사 7명 전원을 임명하되, 국회가 3명,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각 1명씩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정부, 사실상 청와대가 결정한다.

전체 이사의 70%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구조로 실로 독소조항이란 표현이 부족하지 않다.

비슷한 사정인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가 추진 중인 입법은 지역·성별·연령의 균형을 맞춘 100명 규모의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이사 전원을 추천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가진 이사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회사라는 연합뉴스 특성상 구체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연합뉴스 역시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는 판단한다.

진흥회 이사 대다수가 친여권 인사로 채워지는 구조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KBS, MBC, EBS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사 자격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스통신진흥법에는 결격 사유로 '정당의 당원'만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과거 정치인이었으나 현재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인사들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잇따랐다.

예컨대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 캠프에 몸 담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대기업 임직원을 지낸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결격 사유를 구

체화해 정치·자본 권력에 휘둘릴 사람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

◇ 정치적 독립 위해선 전사적 노력 뒷받침돼야  
이에 집행부는 일단 자체적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 초안조차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론노조 주도의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영언론의 독립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시민 대표가 공영언론 이사와 경영진을 직접 뽑는다는 법개정 취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될 수 있고, 연합뉴스의 경우 경쟁매체의 각종 방해공작에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난관을 넘어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선 연합뉴스 구성원의 일치된 의지가 불가결하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연합뉴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는 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부는 설문조사에서 연합뉴스 구성원의 뜻이 확인되고 조만간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노사 공동의 사안으로 격상하고 전사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진 교체기마다 사장 후보들이 여권 실세를 상대로 충성경쟁을 펼친다는 소문이 나도는 낯뜨거운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연합뉴스를 만들기 위해 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1인시위 신청자 명단>

|            |                      |
|------------|----------------------|
| 5월 13일 (목) | 홍제성 전 위원장(운영위원)      |
| 5월 14일 (금) | 김종환 부위원장             |
| 5월 17일 (월) | 공병설 전 위원장            |
| 5월 18일 (화) | 오정훈 전 위원장            |
| 5월 20일 (목) | 정찬욱 대전 충남취재본부장       |
| 5월 21일 (금) | 이주영 전 위원장            |
| 5월 24일 (월) | 권혁장 전 특위간사           |
| 5월 25일 (화) | 육철 전 위원장             |
| 5월 26일 (수) | 이정진 전 사무국장           |
| 5월 27일 (목) | 고성식 지방부장             |
| 5월 28일 (금) | 이세영 전 부위원장           |
| 5월 31일 (월) | 고형규 전 공보위간사          |
| 6월 1일 (화)  | 이강원 마케팅본부 부분부장(비조합원) |
| 6월 2일 (수)  | 정보사업부 최영찬 조합원        |
| 6월 3일 (목)  | 정보사업부 김도형 자장         |
| 6월 4일 (금)  | 최춘환 북한뉴스편집팀장(비조합원)   |